

# 건설노조, 전국 민주당사 점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김한주 기자 | ⓒ 승인 2020.11.23 13:33

이낙연 대표 사무소도 점거 농성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대표 면담 요구

노조 “민생 입법, 눈치 볼 때 아냐”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과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태일 3법을 촉구하며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13곳을 점거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낙연 당대표 사무소도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강한수 부위원장 등 대표단 3인이 점거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오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민중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잦고, 또 반복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는 하루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언제까지 노동자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것인가. 노조는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태일 3법

정주!

전태일 3법  
정주!  
통합노동성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정권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가 요구하는 법안은 수십 년 동안 상정하지도 않았다. 건설 현장은 1년에 6백 명씩 사망한다.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 노동자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거 현장 앞을 방문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잘려 나가는 현실에서 정치권은 악법을 통과하려 한다. 전두환 때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법을 부활하려 한다. 이게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정치인가. 정치권이 전태일 3법을 제정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은 햇불을 들고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과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과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과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과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과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9시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과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